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

2016년 11월 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의당 부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인사말씀]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2016년 11월 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연말연시 바쁜 시간 쪼개어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 전합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한림대 최태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각각 사회와 발제를 맡아주신 미래정치센터 김정진 소장님, 손호철 이사장님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 두 달은 군부독재에 뿌리를 둔 극우기득권세력을 촛불시민이 퇴장시킨 국면이었습니다.

국회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사실상 국민이 이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머뭇거리고 흔들리던 정치권의 멍살을 쥐고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압도적 탄핵 가결은 촛불시민혁명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촛불민심은 우리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재벌, 검찰, 관료, 언론 등 우리사회의 낡은 기득권 질서를 총체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 87년도에 이룬 제2의 민주혁명을 이루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자는데 촛불시민의 주문입니다.

정의당은 촛불과 가장 닮은 정당입니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정의당은 제몫을 해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었고, 다른 정당보다 한 발 먼저 내딛었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일관된 길을 걸었습니다. 국회와 광장을 바쁘게 오가면서 야3당의 당론과 민심을 하나로 묶는 데 역할을 해냈습니다.

저희는 차기대선을 촛불대선으로 만들 것입니다.

탈 박근혜 체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성정치세력간의 권력 교체가 아닌 시대교체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은 어때야 하는지, 또 실천과제는 무엇인지 고민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촛불성과를 극대화 하는 생산적 방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 심상정

2016년 11월 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2월 2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미래정치센터

■ 기획의도

- 촛불의 거대한 힘이 미완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버섯처럼 번진 대한민국의 권력의 오만과 독선, 부정부패, 불의를 뒤엎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특권 세력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촛불이 사그러들기만 바라고 있음.
- 2016년 11월 촛불시민혁명은 오만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을 국회를 통해 가결시켰지만, 탄핵 가결은 기득권과 특권,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일 뿐임.
-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엄중지만, 유쾌한 촛불시민혁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탄핵 이후 큰 틀에서 탈박근혜 체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 및 사회 구상과 기획은 무엇인지, 실천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송년 토론회를 기획.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구성

- 사회자 : 김정진(미래정치센터 소장)
- 발표자 : 손호철(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서강대 정외과 교수)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토론자 : 배준호(정의당 부대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주간),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주최



차례

- 발제문 ① (손호철): ‘11월 시민혁명’, 어디로 가야하나? | 1
- 발제문 ② (노회찬):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과제 | 14
- 토론문 ① (배준호): 성공한 혁명의 지표는 바로 참정권의 확대 | 25
- 토론문 ② (안진걸): 박근혜표 6대적폐 폐기와 완벽한 승리의 길 | 28
- 토론문 ③ (이대근): 탄핵을 넘어, 정권교체를 넘어 | 39
- 토론문 ④ (최태욱): 87년 헌정체제의 개혁 | 43

‘11월 시민혁명’, 어디로 가야하나?¹⁾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1. 역사는 반복하는가?

헤겔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은 두 번 반복된다고 쓴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어버렸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된다.

맑스의 글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다. 프랑스혁명의 공화국 정신을 짓밟고 황제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이 비극이라면, 이후 혁명과 반혁명의 혼란 속에서 삼촌의 명성 덕으로 권력을 차지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는 코미디라고 풍자한 것이다. 그렇다. 근대화라는 이름아래 민주주의를 짓밟고 영구집권을 노렸던 박정희가 비극이라면 루이 보나파르트처럼 아버지의 명성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는 희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소위 ‘21세기 IT강국’이 ‘무당과 호빠 마담의 나라’였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반복되는 것은 ‘인물’만이 아니다.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박정희는 79년 10월에 있었던 YH여자노동자항쟁과 부마항쟁에 의해 ‘퇴출’됐다.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에 의한 저격이었지만 이 갈등을 만들어 낸 것은 이들 항쟁들이었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1) 이 글은 필자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광화문항쟁, 무엇을 할 것인가" 등 그동안 이번 항쟁과 관련해 쓴 글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항쟁에 대해 초기에는 '광화문항쟁'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11월시민혁명'이라고 부르려 한다. 우선 광화문이 중심지이지만 87년 6월항쟁처럼 전국적 항쟁이라는 점에서 '11월항쟁'이 더 적합한 표현이며 시민들이 단순한 박근혜퇴진을 넘어 헬조선 탈피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항쟁보다는 '시민혁명'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투쟁이 11월을 넘어 12월로 이어지고 있어 '2016년시민혁명'이 더 적합할 수 있으나 2017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항쟁이 촉발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의해 몰락하고 말았다. 아직 현재 결정 등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박근혜는 역사적인 '11월 시민혁명'에 의해 이미 퇴진당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부마항쟁은 불행히도, 맑스의 요약처럼, 비극으로 끝났다. 부마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박정희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그가 사육해놓은 전두환 등 정치군인들이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했다. 부마항쟁이 열어놓은 서울의 봄은 거리투쟁에 나선 사회운동과 달리 제도정치들을 고집했던 정치권의 우유부단과 양김의 분열로 광주학살과 학살정권의 출범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만일 맑스의 정식이 맞는다면, 이번 혁명은 그 주인공을 닮아 희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번 항쟁만은 제대로 된 항쟁으로 발전시켜 해피엔딩으로, 성공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2. 무엇을 할 것인가(1)?: 박근혜없는 박근혜체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쟁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박근혜처리문제이다. 물론 박근혜는 압도적 표차로 국회에 의해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들 역시 분노의 촛불이 광화문 등 전국의 광장에 넘쳐나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의당역시 탄핵과정에서 제도정당중 가장 광장과 행보를 같이 했지만 초기에는 조심스런 태도를 취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국회를 탄핵으로 몰고 간 것은 광장의 힘, 촛불의 힘이었다.

탄핵은 가결됐지만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70 퍼센트가 즉각적인 퇴진, 80%가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한국일보 여론조사) 박근혜는 퇴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민의에 반하는 반역사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헌재를 감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광장이 국민주권에 기초한 저항권을 발동한 시민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남은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은 무혈혁명으로 끝날것인가, 아니면 4.19학생혁명이나 프랑스혁명처럼 '유혈혁명'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물론 근 1천만명이 모였지만 폭력이 없었던 지금까지와 같이 무혈의 혁명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민의를 저버리고 반역사적 판결을 할 경우 국

민들은 합법적 수단이 다 소진한 만큼 정당한 저항권에 기초해 현재까지도 탄핵하고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현재판결이외에도 특검의 조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처럼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광장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퇴진(탄핵) 문제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황교안대행체제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10.26이후의 상황이다. 10.26당시 김재규의 영웅적인 거사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김재규를 체포하고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는 김재규가 꿈꾸었던 것과는 달리 계속 최소한의 자유도 억압되는 '박정희없는 박정희체제', '박정희없는 유신체제'라는 비극이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를 끝장내려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5.18학살을 통해 무참하게 짓밟고 대통령자리에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박근혜의 탄핵을 가결했고, 국민의 70%이상이 현재판결이전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수족들이 핵심부서에 그대로 앉아 박근혜표 정책 (최순실 정책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을 계속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 핵심에는 수많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간택하고 (아니 최순실이 간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법무부장관과 총리에 임명된 황교안권한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대표였고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성향의 헌법전문가인 이석연전법제처장이 경향신문인 터뷰에서 잘 정리해 주었듯이 황대행의 권한은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긴급한 현안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탄핵에 의해 무너졌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하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황대행은 과잉의전, 인사권행사 등 '대통령 코스프레'는 말할 것도 없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박근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노무현전대통령 탄핵당시의 고건 전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와 대조적인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 연구자 단체들로 구성된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황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알파가 국정을 마음껏 농락하던 시기에 법무부방관과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헌정파괴를 방조하고 국정농단을 옹호해온 공범"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정공백을 고려 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특히 야당은 황교안권한대행에 대해 최소한의 국가기능유지이외에는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같은 박근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황대행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근혜정책을 계속 고집할 경우 그도 작권남용으로 탄핵해야 한다. 정의당이 이를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의 퇴진이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탄핵당한 박근혜에 의해 임명된 박근혜의 수족들에 의해 박근혜 정책이 지속되는 '박근혜없는 박근혜체제'가 아니다. 10.26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같은 정치군인들에 의해 강제된 '박정희 없는 박정희체제'라는 비극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체제'라는 희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

사실 사태가 이렇데 된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탄핵의결로 탄핵과 사망 선고는 간신히 피했다고 하지만 근실게이트와 탄핵과정은 청와대 못지않게 국회도 자격부재라는 것을 보여준 바, 그 웅변적인 예가 황교안대행체제이다. 국회는, 특히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대행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전혀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 역사적 죄를 저질렀다. 즉 상대방 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느니, 아예 황교안체제가 낫다는 정파적 판단에 기초해 현 사태를 자초했다. 한마디로, 민의를 저버린 직무유기로 탄핵감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광장은 정치권에 황교안과 근실내각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박근혜없는 박근혜체제를 끝장낼 수 있다. 나아가 광장은 내각의 구성으로부터 정책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야권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경우 최근의 법인세인상 포기가 잘 보여주듯이 언제 개혁이 사라질지 모른다(아래 참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와 국회간의 협의체 구성에 광장과 시민도 참여하여 이들의 야합을 감시하고 생생한 광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행정지도부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의 광장지도부는 박근혜퇴진 투쟁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조직화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기여를 이미 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부와 광장의 운동은 단기적인 퇴진운동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장기투쟁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앞으로 벌어질 개헌정국, 대선정국 등 급변하는 정세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대표성과 효율성면에서 한계가 많다. 따라서 조직의 확대재편이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운동이 박근혜퇴진이라는 단일한 공동목표를 놓고 다양한 세력이 모인 '단결적'이고, '1차 방정식적 투쟁'이었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다양한 입장이 대립하는 '갈등적'이고 '고차방정식적 투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갈등을 조정해 통일된 노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광장의 90%는 조직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반시민'들이다. 따라서 주요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현재의 지도부는 '운동내의 대의주의'라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조직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반시민을 지도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김세균 서울대명예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일반시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인가입과 민주적 선출원칙에 의해 부분별/지역별 비상국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들을 묶어 전국단위의 비상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조직이 최대한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 앞으로 있을 주요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이 조직이 박근혜퇴진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터져 나올 개헌, 나아가 문재인, 안철수 등의 분열이 자명해 보이는 대통령선거에서의 대선방침.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민후보'선출에까지 적극 개입하는 것만이 야권의 분열로 야기된 4.19학생혁명, 80년 봄, 87년 6월항쟁의 비극의 반복을 막고 11월 시민혁명을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아래 참조). 광장이 할 일은 단순히 박근혜정부와 그 부역자들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러운 거대보수야당들의 '빨짖'을 감시하고 막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 시민의회 등 최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시민결사체들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광장과 촛불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정치세력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실패로 끝난 시민의회

운동이 보여주듯이 대표성 논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런 조직들이 특정 대권 주자나 정치세력과 연결되어 정파성시비가 벌어지고 서로 적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3. 무엇을 할 것인가?(2): 새로운 공화국을 향하여

이번 '근실게이트'에는 세 층위가 중첩되어 있다. 흔히 '사건사'라고 부르는 표층에는 '73년 체제'(유신체제)와 '고조선'체제(한 학부생의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헬조선이 아니라 샴니즘이 지배하는 '신정일치의 고조선'이었다")가 있다. 표층에서 한 발 깊이 들어간 중간층에는 '87년(헌정)체제'가 있다(요즘도 한국사회를 87년 체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87년 체제는 97년 IMF에 의해 무너져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97년 체제로 변화했고 87년 체제 중 남아있는 것은 87년 헌법에 기초한 헌정체제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심층에는 1대 99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97년 체제'(신자유주의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표층수준이다. 유신체제와 고조선체제가 결합한 근실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겠지만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분야의 국정농단과 탄압 등에 대한 조사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적폐청산'이다. 그리고 이는 '인적 청산'과 '정책청산'으로 나눌 수 있다. 집중해야 할 것은 사드배치, 성과연봉제, 국정교과서, 한일위안부 합의 등 비상행동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6대 청산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대해 정유라 관련사업과 영남대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등 '근실사업', 최근 그 신원이 밝혀진 '복면 집필자'를 포함해 국정교과서 제정과 정, 이미 밝혀진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학계 등 각 분야의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작성과정, 공영방송의 파괴과정 등을 조사해 각 분야에 산재한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

근실과 재벌유착을 파헤쳐야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상균 민주노동총위원장 등 박근혜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된 노동운동가들과 양심수들의 석방을 관철시켜야 한다. 검찰의 사유화과정을 조사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 기제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 없이 의미 있는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국정원 등 여러 정보기관

을 정권유지와 민중탄압에 이용했지만 그것이 어려워지면서 공개된 사정기관인 검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민대표, 변호사대표 등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

다음은 중간층으로 87년 헌정체제이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적인 정치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개헌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현 국면을 개헌이란 문제로 초점을 흐리게 해서 안 된다. 또 현재 개헌을 얘기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다들 정략적 목적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탄핵으로 민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개혁보수신당을 만들고 있는 비박이 안철수의 국민의당, 김종인 등 더불어민주당 비문세력과 연대해 정계개편을 주도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해방정국의 농지개혁, 87년 6월항쟁 당시의 전두환·노태우의 6.29선언 같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적 요구를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흡수해버리는, 그람시적 의미의 (유사)‘수동혁명’(pseudo passive revolution)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러나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장은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현실이 광장으로 하여금 단순한 근실게이트의 청산을 넘어서 ‘민주평등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공화국’에 대해 고민하고 구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화국,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광장을 일종의 ‘제헌의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이 주장하듯이 제 7공화국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들의 바람에 기초한 ‘제 2 공화국’이다.

따라서 개헌이 아니라 ‘새로운 공화국의 구성’이라는 시각에서 기본권으로부터 정부형태 등 이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선이후 국회에서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설사 개헌은 대선이후에 하더라도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구상은 당장 광장이 만들어 정치권에 이에 대한 개헌약속을 받아놓아 이를 강제해야 한다. 대선이후 개헌을 논

의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헌은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의 개헌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의 참여 속에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만 그 방향은 우선 여섯 가지가 떠오른다. 소수자권리 등 87년 이후의 변화를 감안한 기본권의 업데이트와 강화이다. 둘째, 내각제, 집중화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권력을 대폭 양도하는 ‘남한연방제’ 등 권력집중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형태에 대한 고민이다. 셋째, 어쩌면 둘째 보다 더 주요한 문제로 표의 증가성을 파괴하고 사실상의 보수독점정치를 영속화시키는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독일식 연동제로 개혁하는 것, 그리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이는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를 도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구차이로 농촌의 표가 도시보다 세 배 이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의해 아직도 보수표는 한 표가 진보정당표 네 표로 취급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일식연동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이 안에 여당도 관심을 보였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대보수정당들은 올 총선에서 야합해서 비례대표를 오히려 축소했다, 따라서 정부형태 개혁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켜야 한다. 또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의민주주의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현재의 제도를 최소한 ‘질 좋은 대의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

넷째, 민선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강화, 시민발의제 등 고장 난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중은, 시민은 위대하다. 그러나 촛불은, 광장은, 역사의 ‘광기의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지만 이를 폐지하고 완전히 직접민주주의로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고장 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당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수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정당(거지부터 재벌까지 지역으로 모인 ‘초계급적 지역연합’)들로 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기능은 "(국회와 같은) 제도(정치)들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거대정당중심의 한국의 제도정치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의의 위기', '대의의 실패'의 결과가 희망버스로부터 골리앗투쟁, 광화문 노숙투쟁 등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이다. 그리고 그 극적 표현이 바로 현재의 광장이다.

다섯째,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광장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촛불을 '정치적 주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같은 자유주의적인 야당들도,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도 광장의 분노와 열기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정의당은 앞에서 지적할 헬조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왜 당지지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의 포모데스같이, 이들을 정치적 주체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진보적 프로젝트가 보이는 것도 아니다. 답답한 일이다. 핵심은 현재의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지역을 넘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함께 하는) '초지역적계급연합'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를 위해 진보정당을 키우는 것이다.

여섯번째, 새로운 공화국의 핵심내용으로, 헬조선의 주범인 신자유주의(정확히 표현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넘어서 수 있는 '포스트신자유주의'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표층(신유신체제), 중간층(87년 헌정체제)을 넘어 심층에는 헬조선, 흡수저 세습제라는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피해자들은 세계적으로 브릭시트로부터 '트럼프반혁명', '샌더스혁명'(트럼프반혁명과 샌더스혁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두개의 출구, 즉 '반동적 출구'와 '진보적 출구'이다)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11월시민혁명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판 브릭시티'('코릭시트')이자 '한국판 샌더스혁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주촛불집회의 한 청소년의 발언처럼 “내 안의 박근혜와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하고 사람을 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보는 세상”,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과 재벌에 대한 사회의, 시민의, 광장의

통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한,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같은 공범들이다.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제를 확대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고, 쌍용자동차를 해외매각해서 헬조선을 만든 '원조신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아니 과거는 과거라고 치자. 과거는 과거다. 문제는 이에 대해 이들이 아직까지 진솔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정책과 결별한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사실 문재인인의 경우 미르와 K재단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모금에 앞장선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뼈젓이 재벌기업 연구소장들과 회동을 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 자유주의적 야당들은 현재 여소야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헬조선에 대한 광장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헬조선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고 자기들이 약속해온 법인세 인상을 포기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광장이 주도하는 포스트신자유주의 구상이 필수적이다.

답답한 것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경우 그나마 그동안 진보정당으로 반신자유주의노선을 주장해온 정의당이 광장의 99%의 분노를 흡수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것, 정의당과 같은 기존의 진보정당이 아니라면 이들을 묶어서 정치적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샌더스와 같은 지도자나, 시리자, 포모데스같은 새로운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정의당은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사실 이번 사태로 가장 세력이 확장된 것은 이재명성남시장이고 부차적으로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과 같은 구 통진당세력인 것 같다(일각에서는 이재명성남시장을 '한국의 샌더스'로 지명하고 있지만 아직 그같이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자질인 균형감, 정서적 안정감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왜 심상정, 노회찬, 정의당이 아니고 이재명인가? 이와 관련, 심상정, 노회찬도 기성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하고 대중은 새 시대의 새 인물을 바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의당이 대권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샌더스가 민주당에 입당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중들이 정의당보다는 집권가능성이 큰 더민주당의 후보들에 신뢰를 보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재명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관된 복지정책 등으로 대중적 신뢰를 얻은 반면 심상정, 노회찬, 정의당은 이 같은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한 요인일

것이다. ‘이재명현상’은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인 것 같다.

그러나 정의당이 “다른 원내정당들보다 빨리 박근혜 퇴진/하야를 주장하고 촛불항쟁에 적극 가담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유보없는 퇴진/하야가 아니라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움으로써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들을 원한 촛불대중과 거리감을 좁히는 데에 실패했다. 이와는 달리 이재명은 촛불대중의 염원을 유보없이 대변했다..(중략)..게다가 상황이 변하자 친박세력조차도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함으로써 정의당의 질서있는 퇴진론은 낡은 구호가 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것만이 아니고 예는 많다.

정의당은 최근 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혁명의 전진과 완성을 위해 정의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종합적인 비전과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법 개정 및 개헌 등, 촛불혁명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정의당이 내놓아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시대적 과제와 대중의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대중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 하다. 정의당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장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우선 박근혜없는 박근혜체제의 청산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근실게이트와 적폐청산의 구체적 청사진과 헬조선 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화국의 상 등 11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촛불혁명을 선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국은 비박당의 출범과 반기문의 귀국과 함께 불가피하게 ‘개헌정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헌에 찬성하는 비박계, 국민의당, 민주당 비문세력 대 이에 반대하고 현행헌법에 의해 대선을 치르자는 친문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광장은, 그리고 정의당은 문의 손을 들어주며 대선이후의 개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개헌을 대세로 인정하고 ‘진보헌법 만들기’, ‘새로운 공화국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인가 하는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선 대선, 후 개헌’안을 택하더라도 개헌안, 아니 새로운 공화국안을 만들어 야권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다만 문제는 과연 이 같은 전략적 선택에 대해 광장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결국 이 문제로 야권만이 아니라 광장까지도 분열되는 사태가 걱정된다.

‘박근혜 이후’와 관련해, 광장이 할일이 하나 더 있다. 야권, 특히 보수야권의 분열에 따른 87년의 비극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과거와 같은 야권분열에 의한 비극을 피하는 길이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물론 대선여부와 대선의 형태는 개헌논쟁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만일 위에서 비박, 국민의당, 민주당 비문세력이 (친박도 따라갈 것이고)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광장이 개입할 여지자체가 없어진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의원집정부제를 택하되 이들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제 3 지대론을 채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반기문, 안철수 등이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광장의 개입여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 문제로 국한되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제 3지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전 단계에서 개입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있을지 걱정이다.

문제는 제 3지대론이 실패하면서 비박과 국민의 당이 각각 다른 길을 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선은 1) 친박, 비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다자구도이거나 2) ‘혁신새누리당’(비박+친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1여다야’구도로 치뤄질 것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 87년의 비극을 막기 위해 광장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세 정당의 대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개헌과 더불어 대선에 대한 당의 입장, 대선후보를 빨리 정해 정국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선도 대선이지만 진짜 고민은 위에서 지적한 헬조선이다. 더민주, 국민의당은 새누리과 합세해 약속했던 법인세 인상 무효화시켰고 그나마 진보적인 정의당지지율은 5퍼센트수준이다. 이런 판에 설사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진보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표, 문재인표 신자유주의가 벌써부터 걱정이다”는 자조적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헬조선의 신자유주의에 근본적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진짜 고민이다.

이와 관련,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중의 의식역시 불균등하기만 하다. 박근혜퇴출이란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광장도 대선주자들과 정파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속도가 빨라 걱정이다. ‘최대연합을 위한 최소주의’ 노선도 우편향으로 문제지만 좌편향적 ‘최소연합의 최대주의’ 노선도 문제이다. 광장도, 정의당도. ‘최적의 연합을 위한 최적노선’(optimal line for optimal coalition)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4. 촛불이여 영원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문제로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세계 민주주의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한 진보언론에 쓴 글에서 이들과 다르게 “촛불은 위대하지만 촛불이 ‘정치적으로 주체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회성 촛불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행히도, 나의 글은 맞았다. 광우병 촛불은 오래지 않아 꺼졌다. 얼마 뒤 용삼참사가 일어났지만 촛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 박근혜가 승리했다.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광우병집회보다 촛불은 더욱 진화하고 발전했다. 중고생들까지 촛불에 가담했고 집단지성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더 성숙했다. 대중은, 시민은 위대하다. 그러나 촛불은, 역사의 ‘광기의 순간’은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주체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같은 자유주의적인 야당들도,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도 이들의 분노와 열기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광장은,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주체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11월 시민혁명은 맑스의 정식으로 희극으로 끝나서도, 부마항쟁, 4.19 학생혁명, 6월 항쟁과 같은 비극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11월시민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 특히 야권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촛불을 폄하했다. 그러나 4.19와 80년 봄,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보여주듯이 촛불을 꺼트리지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야권의 빨 짓이다. 이 같은 빨 짓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촛불을 내려놓을 수 없다. 촛불이여 영원하라!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과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겸 국회의원)

1. 시작하며

2016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혁명 중입니다. 국민들의 용기 있고 준엄한, 그러면서도 이성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촛불 행동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최고의 국민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롭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파면시키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는 외침은 “새 나라 만들자”는 외침의 다른 표현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재벌 대기업, 고위 공직자들이 뒤엉켜 일으킨 헌정유린, 국정농단, 부정부패와 특권의 난장판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통은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들에겐 “사장님들을 위한 공화국이다”라는 불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흙수저 청년들에겐 “부패한 기득권자들을 위한 나라다”라는 냉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새 나라 만들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낡은 관행들과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사회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대선의 정치적 의미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우선, 30년 전인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좋은 정당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했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기성 정치의 동원 대상, 단순한 구경꾼으로 대상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다수의 소위 정치 엘리트들은 자기 기득권에 안주했으며,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의 거대한 경제력을 발휘해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켜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의제는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거나 미뤄져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은 과거와 현재의 기성 정치세력에게 있으며, 제가 속한 진보정당조차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로 작은 정치세력이지만 진보정당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정책정당 추구, 진성당원제 중심의 민주적 정당 운영 등 좋은 정당정치를 시도하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기치로 내걸고 그러한 진보정치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민생정치 의제도 주목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의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 모여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난 30년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세력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그 요구에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권위 의식과 기득권에 갇혀있거나 오래된 정치관행에 안주해서는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의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는 2017년은 대단히 의미가 큰 한해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국정농단 정권, 부정부패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교체해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민주주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30년 동안 미뤄 온 과제입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를 시작했고, 재벌체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 대선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을 따르는 진보개혁정치는 경제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재벌체제 해체, 중소기업과 노동자·자영업자·농민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공생공존에 관한 경제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오래된 미래구상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2017년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IMF 외환 위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말을 없앴고, 경쟁만능과 물질우선의 가치관을 확산시켰습니다. 또,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다'는 사회적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경제불평등 확산

과 사회양극화 확대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진보개혁정치가 현실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따뜻한 사회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국민들께 제안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불통의 극치를 국민들께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을 거쳐 지난 10년의 새누리당 정부가 남겨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재벌해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를 되돌릴 수 없도록 최소한 30년 동안은 새누리당 보수세력이 집권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조하건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분출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2017년 대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길은,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차기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는 ‘여소야대 국회’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최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에 앞장서서 동참해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에 의해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을 정치적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국민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3.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긴급해결 과제들

대선을 눈앞에 둔 우리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을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확인된 적폐를 시급하게 청산하고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1)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을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의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국정에서 정경유착을 도려내고 전경련을 해체하는 한편, 제2, 제3의 김기춘, 우병우, 김종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잔재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도 환수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아픔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당장 세월호 조기인양 조치를 내리고,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가동시켜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정책’을 폐기하고, ▲‘사드배치협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폭증시킨 1,300조에 이른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입니다. 이중 550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적 재원을 활용한 저소득, 저신용 가계대출의 공공 대출 전환 등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방향

□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정치세력들의 본격적인 개헌 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빠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17년 5월 내지 6월로 예상되고 있는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헌은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내용과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까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만을 급하게 서둘러 실시하는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일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입니다. 강조하건데,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국회에 대폭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개혁으로 민주주의 혁신

한국 민주주의를 ‘국민참여 민주주의’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 구성부터 국민들

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 정당득표율은 33.5%였지만 의석점유율은 40.66%고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은 7.4%였지만 의석점유율은 2%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촛불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대의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도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정책투표안건 지정제도와 ▲국민감사청원제를 도입하고, ▲청원입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심의 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과 정부내 감찰시스템 혁신

대통령 국정운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제 ▲국무회의 중심 국정 운영 ▲국회와 청와대의 협의 활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 ▲검찰인사의 공정성 실현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야 합니다.

행정부 내부의 감찰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제도 강화 등 감사원 기능을 혁신하고, ▲부처별 감찰시스템에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감찰시스템에 대한 평가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병폐중 하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숨은 권력이 검찰권력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30년 동안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기생하며 기득권 세력과 특권세력을 비호하고 그 대가로 권력과 부(富)를 누리는 행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고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기소권을 견제할 재정신청제도 강화 ▲검사동일체 원칙과 내부결재 제도 폐지 ▲검찰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재벌 체제의 해체와 기업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시스템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벌체제는 이제 해체되어야 합니다. 총수일가의 3대 세습 경영체제는 전문경영인과 주주, 노동자, 국민에 의한 협력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키우고,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를 상호 상생·협력하는 경제체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총수 일가 소유 및 지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재도입 되어야 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지배를 개혁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재벌 및 기업집단 단위 지주회사 지정제도 도입 ▲계열사의 지주회사 주식 보유 금지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금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금액을 '시가'로 산정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책임경영과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또한, 재벌 총수 등의 배임·횡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배임 횡령죄를 범할 경우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을 7년 이상으로 늘려 감경사유를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상생·협력 경제의 출발 조치들

재벌체제의 해체와 동시에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는 상생·협력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온 숨은 공로자는 혁신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R&D투자정책을 개혁하고,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보호지역 확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 개설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AI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의 농업보호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확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개혁 ▲친환경농업 육성 및 생협 등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지원 등 농정개혁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4. 맺으며 : 정의당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출범을 위한 각오와 과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낡은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재벌체제를 허물기 시작하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성장 체제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경제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살자’는 사회연대와 배려의 신념을 불어 넣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도전에 실패한 사람도 재기의 발판을 가질 수 있으며, 무한경쟁 보다 협력이 성공의

좋은 수단이 된다”는 신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동하고 여가를 즐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 국민들 각자의 소득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보장 재원을 확대하며,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추구할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체제를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수많은 혁신 중소기업이 성장의 원천이 되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부문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도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러한 국정운영 비전과 전략을 차레차레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하기 위한 정치연대에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정의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적어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충족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의 ‘직접선거’ 원칙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방법은 법률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상대적 다수대표제 결정방식을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보다 더 충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혁명의 지표는 바로 참정권의 확대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

1. 혁명의 주체이지만 참정권의 제약을 받는 청소년

- 이번 촛불혁명에서 청소년들은 당당하게 주체로 참여하여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력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세력화되어 제도권에 반영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음
- 현행법상 만19세부터 투표권이 부여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치 활동의 상당부분이 제약됨

2. 대학생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는 한국 사회

- 국민을 닮은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국회의 모습
- 현행법상 만25세부터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함
- OECD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고 있음 (첨부자료 참고)

3. '30대 기수'의 가능성을 막는 헌법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40세로 규정되어 있음
- 박정희의 '젊은 기수론' 견제로 1962년 12월 이른바 '군정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 당시 처음 헌법에 명시됨
- OECD 회원국 중 대다수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첨부자료 참고)

4. 과제

-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 및 선거권 연령 인하 추진
- 선거권 연령과 일치하도록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인하 추진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헌법 67조 4항(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에 대한 개정 논의 제기

<첨부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국가	선거권	피선거권
오스트레일리아	18(17세도 등록가능)	18
오스트리아	16	18(대통령 35세)
벨기에	18	18
캐나다	18	18(상원 30)
칠레	18	21(상원, 대통령 35세)
체코	18	18
덴마크	18	18
에스토니아	18	21(지방의원 18세, 대통령 40세)
핀란드	18	18
프랑스	18	23세(하원) 30세(상원)
독일	18(일부 주 16세)	18(대통령 40세)
그리스	18	18
헝가리	18	18
아이슬란드	18	18
이스라엘	18(지방선거 17세)	21
이탈리아	18(상원선거는 25세)	25(지방의원 18세, 상원 40세, 대통령 50세)
일본	18	25(중의원) 30(참의원)

한국	19	25(대통령 40)
룩셈부르크	18	21
멕시코	18	21(상원 25, 대통령 35)
네덜란드	18	18
뉴질랜드	18	18
노르웨이	18(생일전이라도 가능)	18
폴란드	18	21
포르투갈	18	18
슬로바키아	18	18
슬로베니아	18	18
스페인	18	18
스웨덴	18	18
스위스	18(지방선거 16세)	18
터키	18	18(대통령 40)
영국	18	18
미국	18(일부 주 생일전이라도 예비선거 투표권 부여)	25(상원 30, 대통령 35)

박근혜표 6대 적폐 폐기와 완벽한 승리의 길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공동대변인)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등의 후안무치함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퇴진행동은 이들의 철저한 심판과 박근혜표 6대적폐의 폐기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1. 지금 당장 대통령의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할 박근혜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현재에 “탄핵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죽을 죄를 졌다’ 던 최순실씨는 지난 12월 19일 첫 재판에서 박근혜와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중범죄자들이 마지막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춘·우병우등이 청문회에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후안무치함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반드시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촛불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매일 촛불집회와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연말 연초에도 계속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12월 31일은 대규모 “송박영신” 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와 최순실 등 중범죄자들이 마지막까지도 나라와 국민을 더 큰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기에 더더욱 현재와 특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조기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며, 최근 정식으로 출범한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등의 중범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나가

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진행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특검 차원에서도 김기춘·황교안·우병우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범혐의, 직무유기, 세월호참사 은폐 문제, 각종 직권남용, 공작통치 문제 등이 반드시 제대로 규명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씨는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 엄벌을 받아야할 중범죄자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최순실 등은 헌재심판을 지연시키며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어떻게든 회복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 해체, 황교안의 즉시 사퇴를 동시에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4. 특히, 황교안씨는 박근혜와 함께 동반퇴진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권한대행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할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퇴했어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노동개약 및 성과퇴출제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이 있어야할 자리는 권한대행이나 총리자리가 아니라 특검 사무실의 피의자석이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한 황교안은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주에 특검 앞에서 공식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던 퇴진행동은 12.26일 11시에는 황교안, 우병우 등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부당하게 좌절시킨 혐의, 세월호 참사 진상을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2.26일 특검에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5. 퇴진행동은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박근혜의 즉각퇴진, 황교안의 즉시 사퇴, 현재의 최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 특검의 완벽에 가까운 철저한 수사를 다방면으로 촉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 그리고 퇴진행동은 현재 박근혜 즉각 퇴진, 현재 조기파면과 함께 시급한 현안인 박근혜표 나쁜 정책의 폐기를 맹렬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대 적폐 폐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6대 현안입니다.

- 세월호 특별법 재 제정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백남기 농민 특별검사제 도입
- 사드 배치 중단
-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촉구
- 성과퇴출제 중단

이것이 촛불혁명의 또다른 과제라고 생각해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산물인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중단하고,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수업이 많은 개혁과제, 경제민주화와 민생민주주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는 위 6대 적폐부터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지금 당장 제시할 개혁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재벌체제 청산, 검찰개혁, 국정원 해체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 별첨 : [100℃ 인터뷰] “2016촛불혁명으로 주권과 시민의식 꽃피는 광장을 갖게 됐다” (한국일보 12월 19일자)

안진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미신고 집회를 기획했거나 불법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는 혐의로 형사 4개, 민사 2개 소송의 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을 만큼 불허 일변도인 정부의 집회 자유제약에 맞서왔다. 홍인기 기자

4·19 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 10월 최인훈은 소설 ‘광장’을 발표한다. 해방과 한국전쟁 기간을 그린 그 소설 주인공 이명준은 ‘밀실’만 있고 ‘광장’은 없는 남한을 피해 월북하지만 그곳은 ‘광장’만 있고 ‘밀실’은 없는 곳이었다. 그는 “밀실은 허위로 가득 차 있으며, 광장은 비어 있거나 혹은 죽었다”고 절망한다. 소설이 발표된 후 56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개인이 진솔하게 숨 쉴 수 있는 밀실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남한에서는 “영웅과 신들의 동상으로 치장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뭉길 수” 있게 됐다. 10월 29일 청계광장에 모인 5만명(이하 주최 측 추산)의 촛불은 한 달여 만인 12월 3일 232만명으로 늘어났고, 12월 17일 8차 집회까지 연인원 8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촛불집회’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진화했고, 광장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거대한 교실이 되고 있다. 10월 29일 이후 매일 진행되는 집회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안진걸(44)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만나 이 경이로운 ‘광장’에 대해 들었다.

5000명 예상한 첫 촛불집회

5만명 청계광장 메워 놀라

부랴부랴 1500개 단체 연대 구성

“이번 촛불 집회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면에서 이전의 집회와 구분된다. 작가 이문열은 “촛불 시위의 정연한 질서가 (북한) 아리랑 축전같이 거대한 집단체조 같이 느껴졌다”며 또다시 낡은 배후세력론을 꺼내 들었으나, 보수층으로부터도 별 호응을 얻지 못했을 정도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나.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는 노동시민단체들의 민중대회로 예정돼 있었고, 그 여

세를 몰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로 이어갈 예정이었다.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민중단체는 이 집회에서 농민생존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같이 절실한 이슈들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 2012년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사실상 5만명 이상 모인 대규모 집회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많이 모여야 5,000명 정도일 것이며, 그 정도도 어디냐 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보니 5만명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 힘으로 경찰이 불허한 광화문광장까지 진출했다. 1년 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곳이 시위대의 광화문광장 진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경찰 차 벽 앞인데 그렇게 쉽게 열린 것이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과 분위기도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경찰도 무리하게 막지 않은 듯하다. 평소 같았으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니 채증해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텐데 그 날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해당 지휘자가 다음날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 속에 원래 집회를 준비했던 노동·민중단체들도 준비했던 구호를 뛰어넘어 박근혜·최순실 규탄과 박근혜 퇴진에 집중하게 됐다. 이번 촛불집회의 성공엔 이들 노동·민중단체의 대승적 조정과 헌신이 큰 몫을 했다. 그 집회 이후 급하게 150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퇴진행동을 구성하고 11월 4일 2차 집회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30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우선 협의체 명칭부터 박근혜정권 퇴진과 여타의 중요 이슈를 결부한 국민운동본부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박근혜정권 퇴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사건의 실체가 속속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그에 맞춰 구호들을 정했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비리 진상규명과 엄벌, 박근혜 퇴진 등으로 구호를 최소화했고, 논의 끝에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도 쓰기로 했다. 다음 집회 참가자들도 사전에 준비된 이런 구호를 자연스럽게 수용했다. 이후 집회가 거듭되면서 다른 의제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등이 그것이다. 자유발언을 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군사협정과 위안부합의 문제 등 이야기를 많이 꺼내더라. 퇴진행동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걷힌 기금들로 무대를 준비하고 행진을 기획하는 일은 물론,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 임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을 설치하는 일, 법원으로부터 집회허가를 받는 실무적인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열린 1차 촛불집회부터 지난 17일 열린 8차 촛불집회까지 8차례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822만여명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서 약 170여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민 자유 발언 절반 넘고
평화시위에 대한 자부심 대단
장애인·성 차별 민감도도 높아

“지금까지 집회가 미리 정해진 연사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들이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촛불 집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시민들의 활발한 자유발언이었다.

“자유발언은 2008년 촛불집회 때도 있었다. 그때는 미리 정한 단체대표들의 발언이 70%라면 자유발언이 3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자유발언이 훨씬 많다. 절반 이상이다. 시민들이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화제가 된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몇십만명이 보기도 한다. 예전에는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면 경찰 등이 채증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전 국민이 응원해주니까 더 적극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 같다. 10월 29일 1차 집회 때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쏟아졌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자유발언을 신청해 무대에 올라간 거다. 11월 5일 집회는 중고등 학생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하니 80~100군데 지역에서 열린다. 자유발언 무대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11월 19일 4차부터는 행진하는 곳마다 무대 차량을 세워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했다. 광화문 자유발언 무대의 경우 ‘자유발언 할 분들 모이세요’ 하면 금방 200명씩 줄을 선다. 이번 집회에는 ‘행포시위대’도 등장했다. 행진을 포기한 시위대의 준말로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지 않고 그냥 무대 앞에 남아서 공연을 보고 자유발언을 듣는 사람들이다. 행진하다

경찰이나 탄핵반대 시위대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행진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을 정도 평화시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11월 13일 3차 집회 당시 내자동 로터리에서 버스 위로 올라간 사람이 1명 있었다. 그때 시민들이 모두 내려오라고 외쳐 충돌을 저지했다. 경찰버스에 꽃을 붙이고, 심지어 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직접 떼주기까지 한다.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나.”

_공연참여자 중 DJ DOC의 노래 가사와 관련해 여혐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여성이나 장애인 성적 소수자 관련 차별과 편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문제의 본질이 권력자들의 국정농단과 심각한 비리임에도 규탄대상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회 초기부터 ‘아녀자’ ‘강남 아줌마’ 같은 표현들이 나온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공교롭게 올해가 ‘병신년’ (丙申年)이어서, 이를 빗댄 조롱도 나왔는데 이 역시 삼가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애인 비하와 여성 비하가 발언이 나올 때마다 ‘광장에 여성과 소수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항의가 빗발쳤다. 11월 5일 2차 집회 때 사회자와 일부 자유발언자의 발언에 대해 11일 사과문을 올렸다. 우리나라 집회 사상 처음으로 ‘인권집회수칙’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동물 비하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 DJ DOC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결국 문제 가사를 고쳐 서울광장에서 별도로 공연을 했다. 모두 더 좋은 세상 바라며 광장에 나온 것 아닌가. 광장에서까지 소수자나 약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염원이 우리가 주권자라는 자각으로 확장되면서 최소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서는 소수자 비하적 표현을 삼가자는 각성과 합의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장에서 이뤄낸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이나 2008년 촛불집회를 합쳐 놓은 것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수백만명의 생각이 쏟아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에 대한 분노가 직접 민주주의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어린이가 촛불을 들고 있다. 김주성 기자

朴 퇴진 표명 · 탄핵... 두번의 승리
언젠가 퇴진행동 해산하더라도
상식 · 정의 회복 위해 노력할 것

_냉정하게 말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아직 어느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정권이 퇴진한 것도 아니고, 탄핵이 성사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추위도 있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촛불의 동력은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언젠가는 광장의 열기가 식을 것이다. 17일까지 8주째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인데.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후 집회 인원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촛불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국민의 70%가 흔들림 없이 현재 결정 이전에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다. 퇴진 후에는 퇴진행동도 해산해야 할지 모른다. 이후 대선이나 개헌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테니까. 그래도 촛불집회로 이룬 공감대인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주권의 실현,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서 박근혜정권퇴진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 개헌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할 온라인 촛불집회 등을 구상할 수도 있다. 우리 이미 두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광장에 모일 때마다 매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냈다. 첫째, 대통령이 퇴진의 뜻을 밝혔고 둘째,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1월 말까지 탄핵이 가결되거나 자진퇴진하면 세 번째 승리가 될 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 국민을 위한 나라로 가는 것이 네 번째 승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 물론 네 번째 승리는 퇴진운동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정영오 여론독자부장 young5@hankookilbo.com

정리=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 별첨 : 창비 및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고문(12.1일)

곧 다가올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광화문으로!

지난 11월 26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과 박근혜·최순실 범죄행각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200만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벌써 5주째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민주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1월 26일은 눈과 비가 내리고 영하의 추위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집회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떨어뜨린 나라의 품격을, 우리 국민들이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전개를 통해서 다시 세계적인 수준의 국격과 민주주의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범죄 일당에 맞선 위대한 국민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4주 연속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경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이룬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행정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당한 권력이 쳐놓은 집회 금지·금단의 영역인 경복궁과 광화문 앞 대로(사직로-울곡로), 청운동주민센터로의 자하문길,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으로의 효자동길, 동십자각 위로의 삼청동길로의 국민행진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1차적인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목표를 넘어 부당한 권력의 금단을 깨뜨리는 2차적인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중대범죄 게이트의 핵심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국기문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이 범국민운동이 이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 엄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음성적인 로비를

한 삼성 및 재벌집단에 대한 분노와, 정경유착·재벌특혜 정책의 영구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중소기업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과 탐욕의 재벌체제를 반드시 해체시키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9일 또다시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한 3차 대국민담화(사람들은 이를 “대국민 담 와“로 부르고 있습니다)를 발표함으로써 분노와 절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범국민적 운동이 최초의 임기단축 언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은 우리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여전히 거절한 측면이 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범으로서 주도한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마지막까지 부인하며 변명과 궤변을 늘어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혁명은 더욱더 뜨겁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희대의 권력사기범인 박근혜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수사(특검수사 포함)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박근혜씨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행위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이자 권력연장의 꼼수요, 국민들의 고통과 나라의 혼란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의 그날까지

그동안 박근혜씨가 저지른 범죄들을 대충만 살펴봐도 각종 중요기밀 누설 범죄, 각종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엄중한 범죄들로, 만약에 일반인이나 보통의 공무원이 저질렀다면 진즉에 구속되어서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런 범죄자가 어떻게 신성한 국민주권의 대표자·대변자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 하루, 단 한시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 절대다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도 더욱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이를 박근혜씨에게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하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더이상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재벌 범죄게이트의 핵심 부역자이자 공범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비호에 나선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에 의해서 강제 해체되고 정계에서 퇴출되고야 말 것입니다. 원내 야3당도(특히 민주당·국민의당은 정의당처럼) 역사와 국민 앞에 사력을 다해 즉시 퇴진운동과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600여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www.bisang2016.net, www.facebook.com/bisang2016)이 11월 29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 총체적 범죄정권의 총책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라고 외친 것이고, 12월 3일 다시 한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자고 제안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제6차 범국민행동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비상하게 규정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나가면서 최후의 국민주권 승리의 순간까지, 완벽한 민주주의 승리의 그날까지 사력을 다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다짐드립니다.

(지금의 비상한 국면에 대한 다양한 좋은 의견과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ngo8518@pspd.org, 위 퇴진행동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한 의견 개진 가능)

탄핵을 넘어, 정권교체를 넘어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한국 사회의 진화와 지체

○ 진화

- 과거 촛불 집회는 정치를 배제했지만, 이번 촛불혁명은 정치를 인정하면서 정치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과 정당정치가 가까워졌다는 점은 시민을 위해, 정치를 위해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헌법상 시민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헌법의 발견, 정치의 발견, 시민의 발견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민의 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 지체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보면 한국 정치 문화는 여전히 회오리 정치, 쏠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간 박근혜대통령 실정에 대한 묵인과 뒤늦은 분노의 분출이라는 양극단이 이를 잘 말해준다. ‘봐주기 아니면 죽이기’의 양자택일이 아닌, 국정의 잘잘못이 드러나는 대로 그에 합당하고도 시의적절한 처벌과 보상의 체계를 일상화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제 청산 가능한가?- 조건과 과제

○ 시민 참여의 확대와 일상화

-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시민의 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이 광장을 떠나면 고립된 개인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시민과 정부, 국회, 정당의 사이는 사실상 빈 공간이다. 중간 조직이 없다. 향후회, 동창회 등 친목회만 번성하고 지역 정치 참여자,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를 주창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없다. 광장 이후 시민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 과도기의 중요성

- 황교안 대행의 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민, 정당의 압력과 견제로 현상 관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 과도기 탄핵 당한 정권으로 인해 기득권의 방어력 약화, 차기 권력의 불확실성이 주는 기회를 활용해 과도기 개혁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다음 집권세력이 분명해질수록 문제의 제도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고 그로인해 개혁은 어려워진다.
- 최소한 검찰, 국정원,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과도기에 완수해야 한다. 대선 전후로는 재벌 개혁, 정치개혁, 정당개혁, 선거제 개혁,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특히 그동안 현상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향유해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던 선거제 개혁은 새누리당의 분열로 인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헌이나 개혁이나

○ 개헌론의 소용돌이에 빠진 정국

- 구체제 청산에 한창이어야 할 중차대한 이 시점에 정치권이 개헌론 공방에 휩쓸려 가고 있다. 개헌파에는 친박, 비박 탈당파, 국민의 당, 정의화 손학규, 민주당 비주류등 다수파를 구성하고 개헌 유보 입장에는 민주당 주류, 유승민 등 소수파이다. 개헌문제로 반민주당 주류, 반문재인 연합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제 청산과 불평등 해소라는 당면 과제에 비춰볼 때 과도한 개헌론 몰입은 친박, 비박의 책임론을 은폐하고 구 집권세력을 면책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개헌론에 편승하기만 하면 모두가 같은 출발선 위에 서게 되고,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을 통해 과거를 세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선 개혁 후 개헌

- 촛불 혁명의 과제 가운데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단기간에 해치울 수는 없다. 헌법과 무관하게 의지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우선 실행하고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개헌 논의에 매몰되면 구체제 청산의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최근 대선 주도권의 수단으로 전략한 개헌 주장은 개혁을 질식시킬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헌은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개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 견제와 감시 체계를 바로 잡지 않는 한 내각제 개헌을 한다해도 제왕적 총리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검찰과 공영방송 독립, 정당개혁, 다당제가 가능한 비례 대표제 확대 등은 권력 견제와 분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혁만으로도 제왕적 권력을 막을 수 있다.
- 권력에 관한 논점을 권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 보다는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표성, 책임성의 문제

○ 촛불혁명의 정치적 성적표가 시사하는 것

- 첫째,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상이다. 이시장의 부상은 시민의 과감한 구체제 개혁과 변화의 욕구를 대변한다. 그러나 이시장이 개혁을 지속할 주체,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변화 욕구를 현실 정치가 수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 둘째, 민주당의 부상, 문재인 정체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취했으나 좌고 우면한 문재인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야당이 변화의 주체이면서 대상이기도 한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새누리당의 몰락이다. 외환위기, 차떼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위기를 극복했던 보수당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처음으로 분열하면서 응집된 기득권의 힘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했다. 향후 명실상부한 신 보수로 재탄생할 것인가, 재통합을 통해 보수당의 위상을 회복할 것인가? 정당 재정렬 가능성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표성의 제고

- 거리의 정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대표의 실패, 다른 하나는 대표와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차이다. 촛불혁명의 정치적 성적표를 고려하면 대표의 실패가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성의 최대화하는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이 절실하다.

대선과 이후의 과제

○ 검증 없는 대선

- 박근혜 실패의 한 요인이 검증 없는 대선이었다고 한다면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 역시 검증 없는 대선이 될 우려가 높다. 실패한 정권이 또 다른 실패한 정권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당, 시민의 적극 참여로 개혁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87년 헌정체제의 개혁

- '질서 있는 퇴진'에서 '질서 있는 이행'으로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상황

- 시민들 스스로가 자축하고 있는 상황: "얼마만의 승리인가?"
 - 그러나, 이번에도 '죽 썰서 개주는' 상황이 재연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 높음
 - 예: 선부른 개헌해서 지역 기반 독과점 세력들에게 집권 기회 주지 말고 시민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해야! (시민평의회 등의 발언)

- 촛불 민심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도 읽어야
 - 대통령 교체만이 아닌 정치교체 혹은 체제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 촛불 민심을 정치개혁의 에너지, 원동력, 엔진으로 삼아야
 - 제왕이 힘 못 쓰는 지금 상태가 승자독식 정치체제 개혁의 호기일 수도

- 그러나 정치개혁 논의가 개헌론 하나에 집중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임
 - 개헌론, 백가쟁명의 시대
 - 여러 정치 세력, 시민사회 단체, 학자 군 등이 제 각각의 개헌론 분출
 - * 대통령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 *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중에서도, 독일 식 vs 오스트리아 식
 - * 대선 전 개헌 vs 대선 후 개헌
 - * 정치권 주도 개헌 vs 시민사회 주도 개헌
 - * 권력구조 개헌 vs 포괄적 개헌
 - *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vs 선거제도 개혁 있는 개헌

□ 개헌 논의의 구심점 필요

- 여-야-정 협의체든 국회-정부-시민사회 협의체든 실질적인 과도정부 작동하게 되면, 거기서 대대적이고 총체적인 정치혁신 작업 시작해야!
 - 국회의장실에서 개헌특위 주도하며 논의를 모을 수도
 - 시민 참여 보장 필요

- 어느 경우든 **논의의 구심체** 세워 거기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설계와 이행 경로 제시해야

- 정치체제는 이른바 '3대 제도'로 구성. 그 모두를 총체적으로 고쳐야 함. 그래야 상보성 유지하며 맞물려 발전
 - ∴ 권력구조 개헌만하면 안 된다!
 - 사회경제 개선 효과가 탁월한 대의제 민주주의인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증대하고 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연정형 권력구조로 바꾼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님

※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화된 다당제 덕분이다!!**

- 한국인들의 다수는 자신들은 실상 '정치적 대표'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대의제 민주주의란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들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간접 운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임. 그러니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즉 대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함 (대의제 민주국가의 대표성 미흡 문제)
-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대표 없이 그저 방치돼있다는 사실임
-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필요는 전혀 없음. 아니, '1인1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회의 다수 성원이기 마련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력은 소수에 불과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비해 오히려 월등한 것이 정상임. 그 다수자들은 표를 모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에게 막강한 힘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임.

- 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정치력 덕분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강자들에 당당히 맞서 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와 합의의 정책결정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임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과물!
-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호남이나 영남 등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왕의 전근대적인 지역 중심 독과점적 정당체계에서 탈피하여 정책, 가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당제를 확립하는 일임
-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다당제)의회와 (다당제)연립정부에 항시적으로 포진해 있을 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고,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이 현실화될 수 있음

- 바쁘고 눈에 바로 쏠린다는 이유로, 권력구조 부분만 교체해서는 부작용 생길 수 있음. 즉, 개악이 될 소지 농후
 - 지역 기반 정당들 혹은 그 보스들 간의 권력 나눠먹기 게임 → 과두체제 + 지역할거주의 악화 → 대의제 민주주의 왜곡
 - 지역 기반 양당제 하 제왕적 총리 등장 가능성도
 - 총체적 개혁,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
-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참에 제대로 된 정당체계 확립하는 일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이룰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
 -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 소상공인, 청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집단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들이 바로 서고, 그 정당들이 강자집단의 대표 정당들과 대화, 타협, 합의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필요

○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이 급선무 or **개헌+선거제도개혁 패키지**

□ 2020년 체제?

○ 목표 : 상기 구심체가 대선 전까지 87년 체제의 '대안 체제' 설계도 제시

- 합의제 정치체제 확립: 선거제도+정당체계+권력구조
- 기본권 강화
- 지방분권국가로의 전환

※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넷 이상이 될 경우,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

※ 헌법에 선거제도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음 (cf. EU 13개국은 헌법에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조항 등이 있음)

○ 구속력 확보 방안

- 상기 구심체가 대안체제를 마련해가면서 동시에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침으로써 ① 개혁 열망의 동원과 조직, ②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③ 초안 작성하여 범국민적 이슈로 확립!
- 대선국면에서 유력 주자들이 개헌논의 구심체가 작성한 초안을 중심에 놓고, 각자의 정치개혁 이행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 "개헌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예: 19대 대통령이 취임 첫 해 1년 간 시민 참여 개헌회의 운영하여 최종안 마련; 2020년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 포함 개헌 작업 완료; 19대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직후 사임)

○ 2020년 체제 수립 가능성

- 19대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포괄적 개헌 작업 완료(2020년부터 효력 발생)
- 2020년 총선 전 비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시민의회 방식)
- 이행순서: ① 2020년 총선, ② 19대 대통령 조기 사임, ③ 새 헌법에 따른 (분권형 or 상징적) 대통령 선출, ④ (국회에서) 행정부 구성